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ICT 초유의 '비상계엄' 막아내다

SNS 등 계엄사태 실시간 중계
온·오프라인 경계 넘어 사회 영향

연일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탄핵 촉구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초고속 통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이 톡톡히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선포한 후 4일 새벽 해제한 비상계엄령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진 스마트폰을 통해 중계 된 비상계엄령은 당일부터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곧이어 10일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특정 단체의 공지나 알림 없이도 여러 플랫폼을 통해 스트리밍 되며 인파를 모으고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10월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번 탄핵 촉구 시위에서 전세대를 넘나드는 결집에 SNS 문화와 초고속 통신 등 ICT 기술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는 급증하는 트래픽으로 약 10분 여간 접속이 지연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유튜브 또한 생중계를 진행한 언론사의 스트리밍 영상들이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했다. 과거 계엄령들과 달리 발달한 인터넷 환경 속에서 계엄령을 실시간으로 접한 사람들이 각 플랫폼으로 집결하며 일어난 일이다. 시민들의 뉴스 확인과 소통에 큰 역할을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

네이버는 "지진, 대설, 태풍 등 재해재난 상황에서 네이버를 접속하여 정보를 탐색했던 역대 사례 중 가장 높은 접속량을 보였으나 대부분 서비스가 정상 가동됐다"며 "온라인 접속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을 뜻하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구축해둔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 연속성계획)이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또한 과거 경주·포항 지진 당시 카카오톡에서 나타난 트래픽 급증 경험을 토대로 보강한 비상대응 체제로 지연 없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집회 시위 경험이 많지 않은 시민들까지 탄핵 촉구 시위로 결집시킨 것은 각 개인들이 만든 다양한 정보 알림과 SNS의 전파력이 역할을 했다.

지난 7일 익명의 IT 개발자는 '촛불집회가이드'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위 가이드를 자청하고 나섰다. 준비물부터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 자주 찾는 장소(화장실), 시민들이 전달하는 서포트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까지 총망라했다.

사이트를 개설한 당사자는 "하나의 촛불이라도 더 모일 수 있길 바라며 용기 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사람들이 음식배달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는 식음료 또한 상당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식배달 플랫폼을 통해 식음료를 선결제 한 후 SNS를 통해 사실을 알려 시위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돌록 한 것이다. 8일 H씨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여의도 KBS본점에 위치한 한 카페에 아메리카노 100잔을 선결제한 사실을 알렸다. H씨는 "꼭 따뜻한 커피 받아 추운 몸을 녹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깃발과 응원봉 등도 스트리밍과 SNS에서의 유머로 받아들여지며 과거 여느 시위보다도 많이 등장했다. 동호회를 통해 깃발을 제작하고자 했던 윤해진(31)씨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제작 사이트에서 주문하려 했더니 아예 접속량 초과로 홈페이지가 뜨지 않았다"며 "전화로 문의하자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이야길 들었다. 재미있는 깃발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았다. 9일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탄핵 촉구 반대 집회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남성 고교생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그대로 스트리밍됐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영상으로 순식간에 남고생의 신상정보가 털렸고 사람들은 그가 다니는 고등학교 SNS 계정으로 몰려가 항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위를 보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생각을 했다"며 "평화 시위의 이면에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삭제 되지 않는 온라인의 영속성이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AI·통신 등 산업 첨단화 '발목' R&D 예타 폐지 물 건너가나

통과 예정이었던 ICT 현안 급제동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 약화 우려
"안정적인 투자 환경 만들어줘야"

계엄 사태로 인해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연내 통과 예정이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현안들의 추진이 모두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AI 기본법은 물론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에 대한 논의가 모두 뒷전으로 밀린 것. 이에 따라 국내 정치리스크로 인해 ICT 관련 투자 속도가 늦춰지면서 한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됐던 단통법 폐지안도 물거품되며 가계 이동통신비 절감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오르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연내 통과할 예정이었다. 지난 달 여야는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업계는 단통법 폐지안 등 ICT 관련 현안들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연내 이들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사위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의하면서 정책 법안 심의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연내 가계 통신비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게됐다.

단통법 폐지안의 추진 불발로 알뜰폰 지원책 수립 또한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달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국회 과방위도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규제를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ICT 현안이 처리가 모두 보류되면서 연내 수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번 단통법 폐지안이 보류된 것을 기회로 해당 법안을 다시 재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통신3는 본업인 통신업을 탈피해 비통신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공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단통법 도입 이전과 달리 최근 알뜰폰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점도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따. 때문에 단통법 폐지안을 이번 기회로 다시 재정비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다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밖에도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AI 기본법도 뒷전으로 밀리면서 글로벌 AI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ICT 업계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AI 기술 육성 및 산업 진흥에 대해 정부가 지원케 하는 AI 기본법까지 보류돼서다. AI 기본법은 AI 법적 정의부터 기술 육성 및 규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관련 기업들은 AI 학습데이터 범위,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저작권 문제 등의 기준을 설정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불투명해졌다. 또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협력했던 관련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ICT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AI 산업에서 적극 나서려면 규제 장벽을 없애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연말특수 '깜깜'… 유통업계, 실적방어 안간힘

'정치적 불안정' 새로운 변수 작용
주중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실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내부 사진 /뉴시스

마트와 백화점들이 연말연시 대목을 노리며 신년 준비에 돌입했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유통업계에 정치적 불안정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하나둘씩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신년맞이 준비에 나섰다. 대형마트는 오는 12일부터, 백화점은 20일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연말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우려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이번 연말과 설은 경기 악화로 부진했던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선제적으로 설 선물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 홈플러스는 주류와 육류 제품군을 강화했으며, 롯데마트는 지난해보다 설 선물 사전 예약 대상 품목을 늘려 총 800여 가지의 상품을 선보인다.

그러나 갑작스런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어지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계획을 미루는 등 연말 특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말 특수에 제동이 걸릴 경우 유통업계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인해 마트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재무 상황이 가뜩이나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이 4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으며, 이마트도 할인점 부문 매출이 4.4% 줄었다. 백화점 업계 역시 부진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주요 3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9%, 12.7%, 5.3% 감소하며 내수 경기 침체를 실감하게 했다.

한편, 불안한 정국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우려는 마트와 백화점을 넘어 의류 업계에도 퍼질 전망이다. 길어진 가을로 겨울 계절 특수만을 노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버린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김 모 씨(29)는 "평소 같았으면, 백화점도 다니면서 연말 쇼핑을 많이 했었을 텐데,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옷 구매에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